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아베그지트(Abe+Exit) 현실화되나?

목 차

■ 아베그지트(Abe+Exit) 현실화되나?

Executive Summary	i
1. 전후 최장 경기 확장 기대 고조	1
2. 위협받고 있는 아베노믹스	2
3. 시사점	8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아베그지트(Abe+Exit) 현실화되나?

■ 일본경제, 전후 최장 경기 확장 기대 고조

최근 일본경제는 전후 최장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경기동향지수(현재 및 향후 경기 향방 판단 기준)와 일본은행의 단칸(短観)지수(일본기업들의 업황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심리 판단 기준)를 살펴보면, 향후에도 일본경제는 양호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한 2019년 1월이면 일본은 전후 최장기에 이르는 경기 확장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경기는 좋지만 아베그지트(Abe+Exit, 아베 퇴진) 논란이 가속화되는 등 아베노믹스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불투명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일본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위협받고 있는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는 물론 아베내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률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소득 증가세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으로 노동분배율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일본의 실업률은 2018년 들어 2%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시장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현금 급여총액 증가율은 1%대에 그치는 등 일본정부의 임금 상승 목표 3%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고용자보수의 비중 즉, 경제 전체에서 근로자 몫으로 분배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은 2016년 50.0%로 아베내각 출범 당시인 2012년 51.2%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둘째, 최근 들어 노동생산성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용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취업자 1인당 명목 노동생산성 규모는 아베내각 출범 이전인 2011년 785.7만엔에서 2016년 830.3만엔으로 약 5.7%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동 증가율은 2016년 들어 0.1%에 그치는 등 이전 1% 이상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셋째, 일본정부의 재정건전화는 지연되고 있어, 향후 일본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베내각은 2020년을 목표로 설정한 지방을 포함한 국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계획을 5년 후로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기 계획도 현재의 총요소생산 수준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뿐 아니라 경제 전

반의 노동투입량을 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수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증세, 사회보장비 지출 억제 등 세출 조정,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통한 성장 모멘텀 개선 등의 추가적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학스캔들에 이어 관료사회의 비리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아베내각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등 일본 내 정책 추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2017년에 문제가 된 카케학원(加計學園)의 국가전략특구 내 수의대 신설 관련 아베총리의 부당한 압력행사에 이어 모리토모학원(森友學園)에 대한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일본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사건 등 사학스캔들이 정치 문제로 비화되었다. 또, 이라크에 파병된 일본 육상자위대의 문서은폐사건으로 이나다 토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사임한 바 있다. 이러한 스캔들은 아베내각 성립 당시의 60%를 상회하는 내각 지지율을 최근 30% 후반대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섯째, 북핵문제를 둘러싼 Japan Passing 논란에 이어 對美 정상외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등 외교적으로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한국과는 독도, 일본 위안부, 역사교과서, 평화헌법 개정 등의 현안에 대해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는 한편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일대화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냉담하다. 중국과도 영토문제 등으로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처지다. 믿었던 미국과도 지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의 對日 무역제재 지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에의 미국 참여 대신 美日 FTA 추진 등을 밝힘으로써 일본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외교적으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

■ 시사점

한국은 아베내각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과정을 잘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활용하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 및 추후 과정에 있어서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성장과 분배의 양립을 위한 적절한 정책 균형점을 찾는 한편 우려되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경기조절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해야 한다. **둘째**, 정책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실행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 제고, 실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주변국과의 의사소통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진전 시 이들 국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1. 전후 최장 경기 확장 기대 고조

○ 최근 일본의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면서, 전후 최장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 이어지고 있는 경기 회복세

-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경기동행지수(현 경기 상태를 나타냄)가 2월 들어 반등했을 뿐 아니라 경기선행지수(향후 경기 향방을 나타냄)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기업심리도 아직은 양호한 수준

- 일본은행에 따르면 기업심리를 나타내는 단칸(短観)지수도 2018년 1/4분기 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향후 세계경제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일본경제는 전후 최장기에 이르는 경기 확장기를 맞을 가능성이 큼¹⁾

○ 이하, 일본경제의 대내외 리스크요인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함

< 일본 경기동행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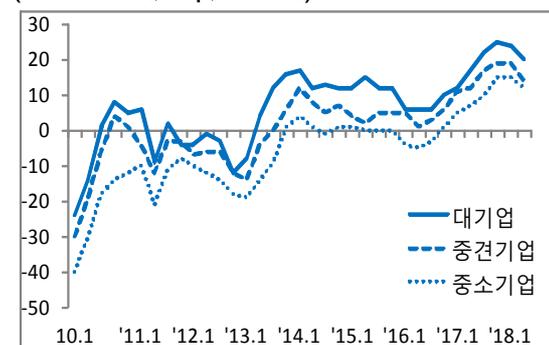
(단위: 월, p)



자료 : 日本 内閣府.

< 일본 제조업 단칸(短観)지수 추이 >

(단위 : 분기, %p, 제조업)



자료 : 日本銀行.

주 : 단칸지수는 기업의 경기 심리를 나타내는 BSI(경기실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로 2/4분기는 예측치.

1) 일본의 최장의 경기 확장기는 이자나미경기(いざなみ景氣, 2002년 1월~2008년 2월의 총 73개월)인데, 2012년 12월 아베내각 집권 후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가 2019년 1월까지 지속된다면 일본경제는 전후 최장의 경기 확장기를 맞게 됨. 이자나미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창조신이자 천황가의 황조신인 이자나기의 아내.

2. 위협받고 있는 아베노믹스

○ (미약한 소득 증가세) 실업률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소득 증가세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으로 노동분배율은 악화

- 실업률 개선세 지속

- 일본의 실업률은 2017년 1월 3.0% 수준에서 2018년 1월 2.4%까지 하락, 이후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과 3월 연속 2.5% 수준을 유지

- 실업률 개선에 못 미치는 소득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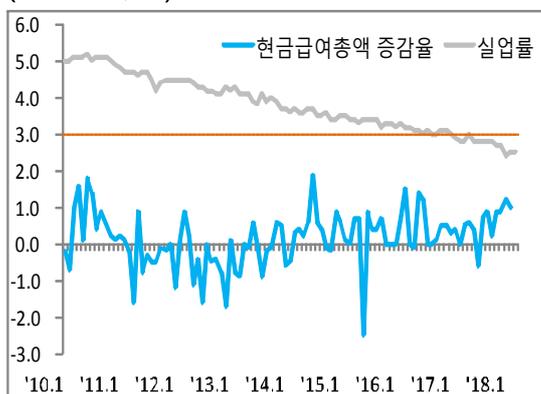
- 일본의 현금급여총액 증가율은 2018년 들어 1%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2% 중반대의 실업률을 보이는 등 고용환경의 개선세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
- 더욱이, 일본정부의 임금상승 목표 3% 수준에 크게 미달

- 노동분배율 악화

-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고용자보수의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은 아베내각 출범 당시인 2012년 51.2%에서 2015년 49.2%까지 하락
- 2016년에는 50.0% 수준으로 소폭 회복했으나, 여전히 아베내각 출범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 현금급여총액 및 실업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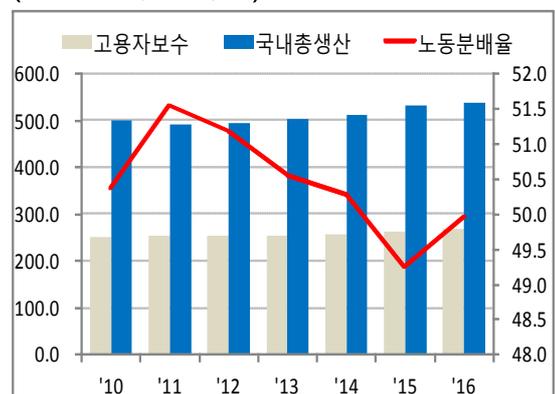
(단위 : 월, %)



자료 : 日本 總務省, 厚生労働省.

< 일본 노동분배율 추이 >

(단위: 연간, 조엔, %)



자료 : 日本 内閣府.

주 : 노동분배율 = 고용자보수 ÷ 국내총생산 × 100.

○ (개선되지 않는 생산성) 최근 들어 노동생산성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용(급여) 증가세에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명목 생산성 개선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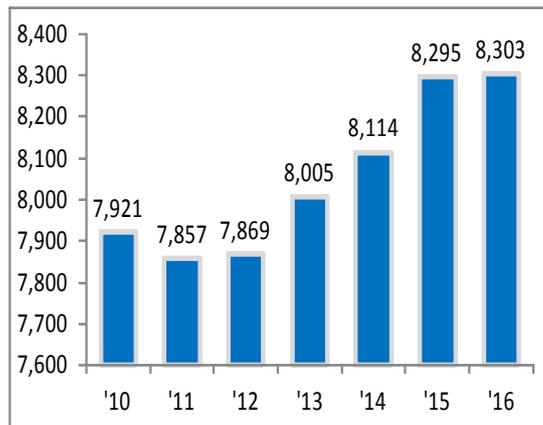
- 일본의 취업자 1인당 명목 노동생산성 규모는 아베내각 출범 이전인 2011년 785.7만엔에서 2016년 830.3만엔으로 약 5.7% 개선
- 다만, 2013년부터 1% 이상 수준으로 개선되던 취업자 1인당 명목 노동생산성은 2016년 들어 0.1% 상승에 그침

- 급여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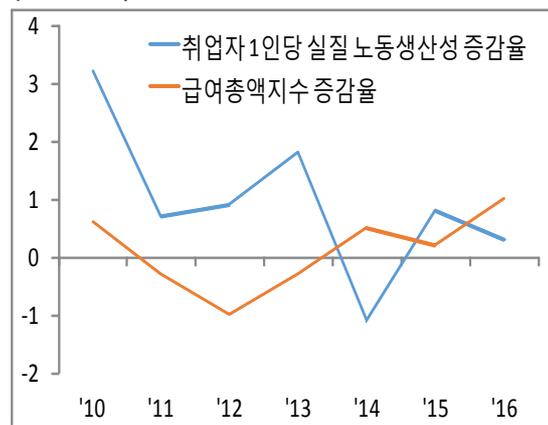
- 취업자 1인당 실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4년에 마이너스 수준으로 급락한 후 최근 들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매우 미약한 수준의 추이를 보임
- 반면에, 급여총액지수 증감율은 2014년부터 플러스 수준으로 전환, 2016년에는 1.0%를 기록하면서 1인당 실질 노동생산성 증가율 0.3%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취업자 1인당 명목 노동생산성 > < 일본 취업자 1인당 실질 노동생산성 및 급여총액지수 증감율 추이 >

(단위: 천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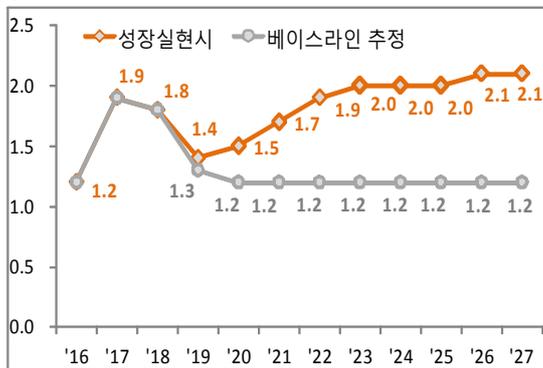
자료 : 日本生産性本部, 日本の労働生産性の動向 2017年版.

○ (지연되고 있는 재정건전화) 아베내각은 당초 2020년에 지방을 포함한 국가 기초재정수지의 흑자화를 꾀했으나, 최근 이를 5년 지연하는 방향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정할 방침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란 재정 건전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보장이나 공공사업 등 정책에 사용되는 경비를 얼마나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
- 일본 경제는 투입요소의 극적인 변화없이도 고성장 달성이 곤란
 -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참가율이 점차 개선된다고 가정(베이스라인)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실질 1%대 초반 성장에 머물 전망
 - 아베노믹스가 경제재생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현재의 생산성이 2배 이상, 노동참가율이 최대한 개선된다는 가정이 실현될 경우 일본경제는 실질 2%대 성장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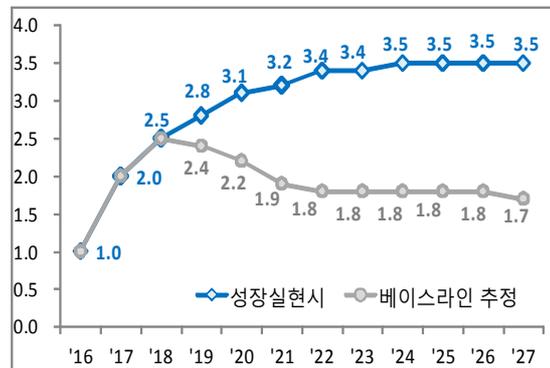
< 일본 GDP 성장률 추정 >

(단위: 실질, %)



< 일본 GDP 성장률 추정 >

(단위: 명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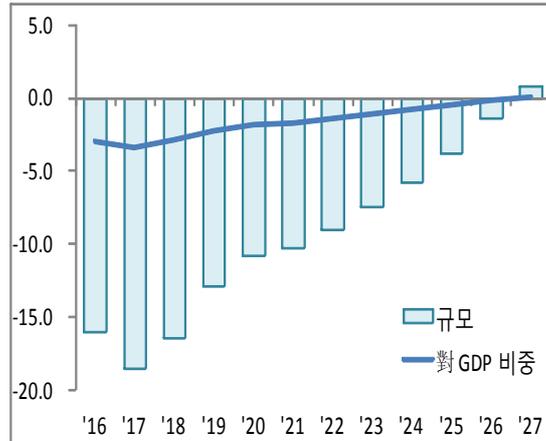


자료 : 日本 内閣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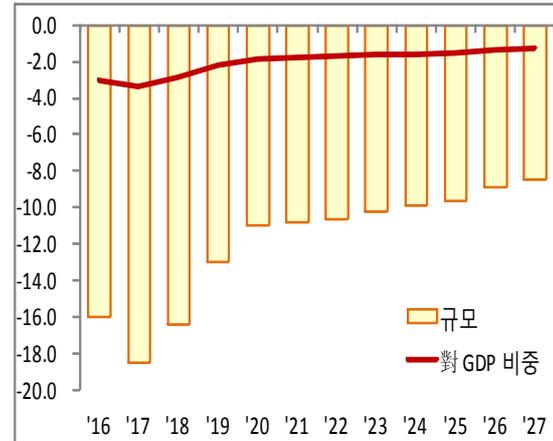
- 주1) 성장실현시 가정 : 아베노믹스의 디플레 탈출, 경제재생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을 경우 가능한 GDP 성장률 수준으로, 총요소생산성이 현재의 0.7%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상승하고 노동참가율이 최대한 개선될 경우.
- 주2) 베이스라인 가정 :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참가율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가정.
- 주3) 기준 년도는 당해년 4월에서 익년 3월까지임.

- 일본경제가 고성장한다는 가정 하더라도 증세, 사회보장비 지출 억제, 세출 조정,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성장 모멘텀 개선 등의 추가적인 과제 해결 없이는 기초재정수지의 흑자화는 어려울 전망
 - 일본경제가 베이스라인 가정에 따른 성장경로를 거친다면 2027년에도 기초재정수지의 대규모 적자는 회피하기 어려움
 - 매우 강한 가정인 성장실현시의 경우에도 2027년이나 기초재정수지가 흑자화될 것으로 추정됨

< 일본 기초재정수지 추정(성장실현시) >
(단위: 년도 기준, 조엔, %)



< 일본 기초재정수지 추정(베이스라인) >
(단위: 년도 기준, 조엔, %)



자료 : 日本 内閣府.

- 주1) 성장실현시 가정 : 아베노믹스의 디플레 탈출, 경제재생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을 경우 가능한 GDP 성장률 수준으로, 총요소생산성이 현재의 0.7%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상승하고 노동참가율이 최대한 개선될 경우.
- 2) 베이스라인 가정 :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참가율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가정.
- 3) 기준 년도는 당해년 4월에서 익년 3월까지임.

○ (끊이지 않는 비리) 사학스캔들에 이어 관료사회의 비리 등 끊이지 않으면서 아베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일본 내 정책 추동력이 약화

- 각종 스캔들의 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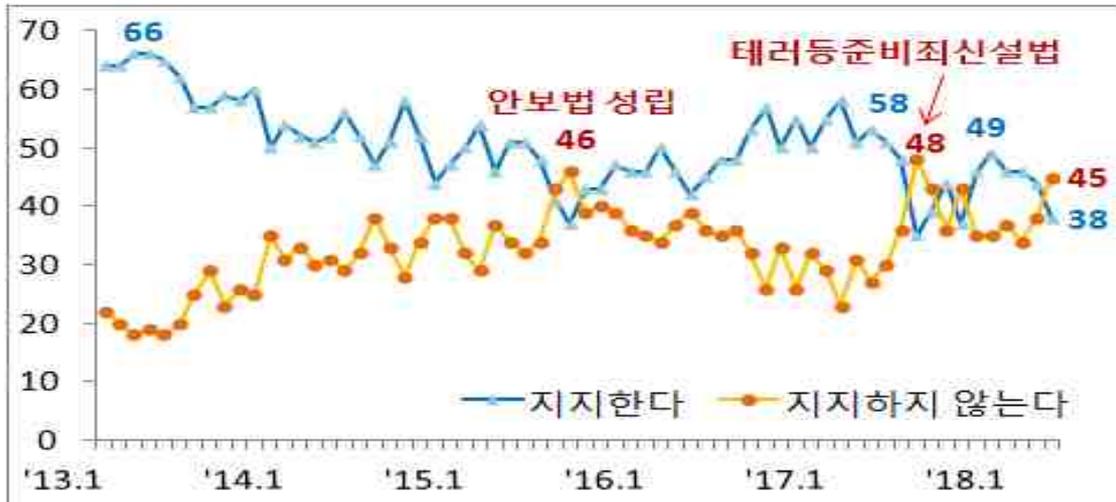
- 2017년에 문제가 된 카케학원(加計學園)의 국가전략특구 내 수의대 신설 관련 아베총리의 부당한 압력행사에 이어 모리토모학원(森友學園)에 대한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일본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사건 등 사학스캔들이 정치 문제로 비화
- 이라크에 파병된 일본 육상자위대의 문서은폐사건으로 이나다 토모미(稲田朋美) 방위상 사임 등 각종 스캔들이 아베내각을 위협

- 지지율 하락과 아베퇴진운동의 시작

- NHK방송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아베내각 집권 초기 6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2018년 들어 급락하기 시작하여 4월에는 38%까지 하락

- 최근 일본 내에서는 아베퇴진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등 해외에서도 아베츠키카레(安部疲れ, 영어로는 Abe Fatigue)²⁾, 아베그지트(アベグジット, Abe와Exit의 합성어로 아베 퇴진을 의미)로 표현될만큼의 위기에 봉착

< 아베내각 지지율 추이 >



자료 : NHK放送文化研究所, 政治意識月例調査.

- (성과없는 아베외교) 북핵 문제를 둘러싼 Japan Passing 논란에 이어, 對美 정상외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등 외교적으로도 난관에 봉착

- 북핵 문제를 둘러싼 Japan Passing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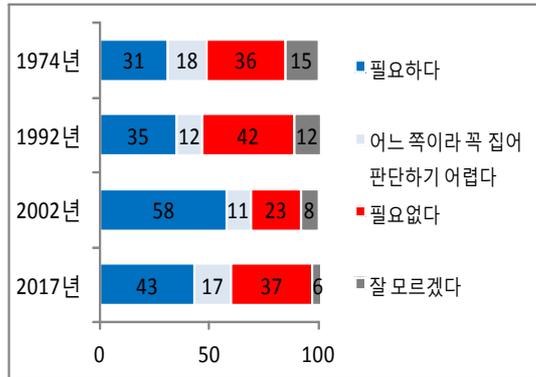
- 한국과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와 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 평화헌법 개정 문제 등 한일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
- 이에 반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일본의 이해에만 몰두하는 인상을 비춰 북한과의 대화채널인 한국의 협력을 얻기 힘든 상황
-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물론 아베총리의 북일 대화 제의에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존재감이 상실³⁾

2) 1년 전에 있었던 독일 총선 전 난민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총리를 두고 'Merkel Fatigue'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컸는데, 아베츠키카레는 최근 아베총리 개인은 물론 아베내각 전체의 모습이 과거의 메르켈총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비유한 표현.

3) 오는 5월 9일 한중일 수뇌회담이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일본의 아베총리는 납북자문제를 북핵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나, 한중 양국과 일본 간 현안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전제하지 않는 한 한중 양국의 협력을 얻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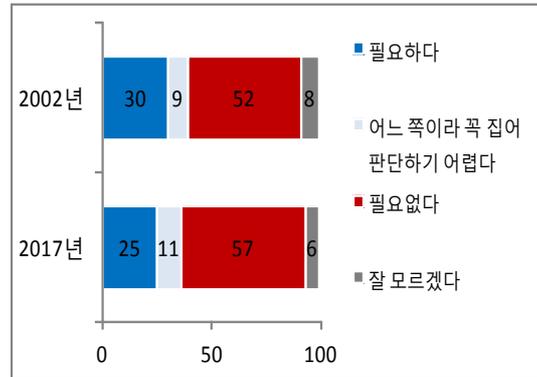
< 헌법개정의 필요성 >

(단위 : %)



< 헌법 9조 개정의 필요성 >

(단위 : %)



자료 : NHK, 2017년 3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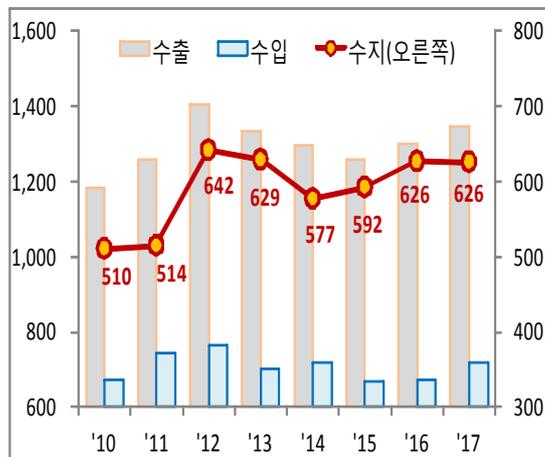
주 : 일본헌법 9조(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평화주의를 규정.

- 對美 정상외교에서도 큰 성과가 없어 외교적으로도 큰 난관에 봉착

-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조차도 지금까지 일본은 무역 부문에 있어서 미국을 교묘히 속여 왔다며 對日 무역제재 지속을 주장
- 아베총리에 대해서는 4월 18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와 미국의 통상대표부 간 무역협의를 시작할 것이며, 수입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일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대신 미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교섭을 시작할 것을 제안

< 일본 對美 무역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자료 : JETRO.

< 미일 수뇌회담 기자회견 주요 내용 >

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정부와 美통상대표부(USTR)의 무역협의를 시작 - 미국의 일본제 철강 및 알루미늄 對美수입제한 조치 유지 - 미국은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시작을,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에 미국 참여를 주장
북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 실천 요구, 비핵화실현까지 양국의 압력 지속 합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 납북피해자 석방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 추진에 대한 양국간 이해 공유

자료 : 日本經濟新聞 포함 국내외 언론 종합.

3. 시사점

- 한국은 아베내각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과정을 잘 살펴보고 반면 교사로 활용하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 및 추후 과정에 있어서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첫째, 성장과 분배의 양립을 위한 적절한 정책 균형점을 찾는 한편 우려되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경기조절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아베내각이 약 5년 4개월 동안 장기집권 가능했던 것은 아베노믹스라는 일본경제재생전략이 그나마 기능하였기 때문임
 -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볼 때 성장과 분배 어느 한 쪽을 우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적절한 정책 균형점을 찾는 것이 시급함
 - 한편, 최근 국내 경제는 미국의 금융·통화 정책 정상화 및 통상압력 고조와 같은 대외 경제 리스크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고용위기가 지속되는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상존해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경기조절책이 긴요한 시기임
- 둘째, 정책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실행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 제고, 실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아베내각에게 결정적인 위기를 안겨주고 있는 것은 사학스캔들과 같은 각종 비리임
 - 이러한 문제들은 적법하지 않은 등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생
 - 실행과정에서도 모니터링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이 부조리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셋째, 주변국과의 의사소통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진전 시 이들 국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함
- 우리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신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의 연계발전전략, 중국 주도의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와 일본 주도의 ADB(The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의 협력이 매우 중요

이부형 이사대우 (2072-6306, Leebuh@hri.co.kr)